

## 세대와 쟁점: 2·28민주운동 연구 비평\*

변영학\*\*

### • 요약 •

본 연구는 2·28이라는 한국 최초의 민주운동에 대한 연구 저작들의 역사와 현황, 쟁점을 분석한다. 1980년대 민주화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1990년대 연구 1세대, 2000년대 2세대, 2010년대 3세대가 형성되었다. 흥미롭게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들 인식론적 공동체 내에 2·28을 설명하는 방법론, 서사 구조, 맥락, 관습, 가정은 상이하다. 주요 쟁점은 2·28정신의 기원, 2·28의 주체와 성격, 4월혁명과의 연관성이며 이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기대한다.

주제어 : 2·28민주운동, 4·19혁명, 민주주의, 민주화, 한국정치

“지방사는 국민국가의 역사가 지방의 지역공동체를 포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정도에서 지역공동체의 역사를 포함한다(루이스 머포드)”<sup>1)</sup>

### I. 문제 제기

1960년 2월 28일 수많은 대구의 고교생들이 이승만 권위주의정부의 선거 동원과 학원의 정치도구화에 반대하여 거리로 뛰쳐 나갔다. 이 사건은 대전 3·8의거, 마산 3·15의거

\* 이 논문은 2022년 화성장학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지원한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학술연구비로 수행한 연구이다.

\*\* 대구가톨릭대학교

1) Mumford, Lewis, “The Value of Local History”, Carol Kammen, ed., *The Pursuit of Local History: Reading on Theory and Practice*, AltaMira Press, 1996, pp.85-89. 장세룡, “탈근대와 지방사 연구: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대구사학』, 93집, 대구사학회, 2008, p.1에서 재인용.

를 거쳐 서울로 집결하는 민주항쟁으로 분출되었고 이승만 정부는 퇴진하였다. 2·28민주운동(이하 2·28)은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항쟁이었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시민사회를 억압하여 그 정치적 정당성을 침해하면 민주적 저항이 일어나는 주기적 동원(cycle of mobilization)의 패턴을 보인다. 2·28은 권위주의 국가와 시민사회의 길항적 권력관계를 최초로 구조화시켰다.

2·28과 4·19 정신은 1961년 군부 쿠데타에 의해 오랜 동안 침묵하였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서야 빛을 보게 되었다. 2·28은 당시 주역들과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그 기념과 기억이 제도화되었다. 1990년 2·28 기념탑의 두류공원 이전과 2·2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설립, 2013년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건립, 2018년 국가기념일 제정 등 2·28정신은 민주 국가의 공인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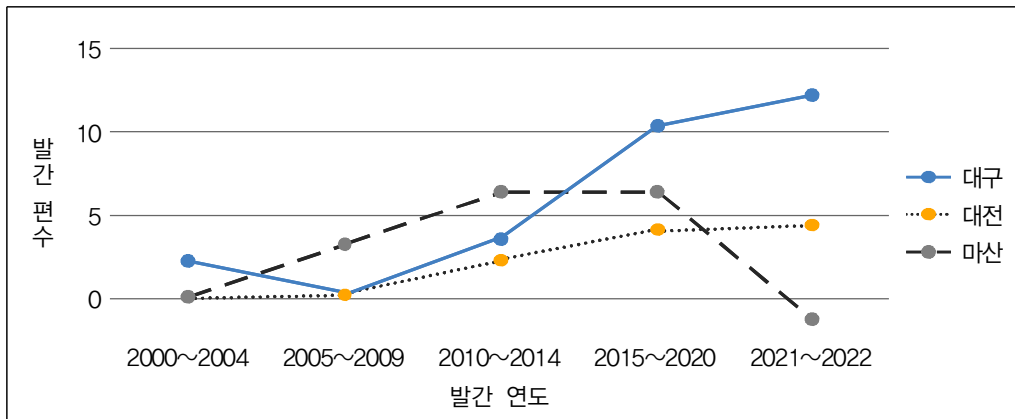
2·28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한 기념, 기억, 연구는 일종의 인식론적 공동체(epistemological community)에 의해 주도되었다. 2·28 주역들이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로 조직되고 기념사업회는 지역 대학의 교수 및 전문연구자들을 네트워크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창출했다. 2·28의 기념과 기억은 기념사업회가 대구광역시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식(기념식, 민주시민교육, 특강, 백일장, 대구정체성찾기운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2·28에 대한 학술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그 이슈 혹은 쟁점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2·28에 대한 사실적 분석이 아니라 그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연구의 역사와 현황, 쟁점을 분석하는 메타비평이라 하겠다. 2·28 연구자들은 일견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의미 부여에서 동질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들은 대부분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학자이고, 잊혀진 2·28과 그 정신을 학문적으로 복원하여 대구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 보면 상당히 다르다. 2·28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과정을 설명·분류·해석·조직하는 서사 구조, 맥락, 관습에서 상이한 결을 보인다. 2·28 관련 연구성과의 분석을 통해 저자들의 내러티브(narrative), 관념, 가정, 논리 등을 분류하여 비교한다면 향후 연구의 쟁점과 과제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 동안 2·28 연구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미흡했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문 서두에 일부 연구를 소개하는 ‘문헌 연구’를 하나의 챕터로 넣은 후 자신이 관심 갖는 연구 주제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을 썼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존 관련 문헌을 검토하는 독자적인 연구가 없었다. 물론 2·28연구의 중심이라 할 기념사업회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50년』, 『2·28민주운동 기

『기념사업 60년』은 각 발행 시점에서 2·28 연구물을 정리하였지만 그것은 연구성과를 나열 식으로 서술했을 뿐이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민주운동』은 여러 학자의 연구 성과를 적절하게 섞어서 2·28을 설명한다. 『2·28민주운동 연구의 어제와 오늘』은 기념사업회가 주최했던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원고를 시기 순으로 편집하였다.<sup>2)</sup> 그러나 2·28 연구물과 저자들이 갖는 내러티브와 서술방식, 논리 등이 구별·분류·분석되지 않고 원고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여 인쇄하였다.

2·28 연구는 양적 수준에서 얼마나 발간되었나? 우선 1960년 시민들의 저항은 서울 지역보다 먼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나타났다. 서울이 아닌 지역 3곳에 나타난 민주항쟁에 대해 연구물의 양적 성과를 비교해보자. <그림 1>은 200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발간된 학술 논문의 건수를 정리한 것이다.<sup>3)</sup>



(출처: 저자 작성)

<그림 1> 연도별 논문 발간 편수

전체적으로 학술논문은, 2000년대에 5편 이하에 머물다가 2010년도 이후 증가하였다. 흥미롭게도 대전 3·8과 마산 3·15에 대한 연구 성과는 2010년 이후 정체되거나 줄어드

2) 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50년』, 대구: 기념사업회, 2010. 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운동 기념사업 60년』, 대구: 기념사업회, 2021. 김노주,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민주운동』, 대구: 기념사업회, 2022. 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 연구의 어제와 오늘』, 대구: 기념사업회, 2022.

3) 1960년 이승만정부를 붕괴시킨 일련의 지역 민주 운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대체로 민주화와 지방자치 제도가 안착되는 2000년 이후로 나타나기 때문에 논문 발간 편수는 2000년 이후부터 2022년까지 집계하였다. 인터넷 학술검색엔진(KISS, RISS, DBPIA)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에서 출간된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 논문을 검색하였다. 대구, 대전, 마산을 아우르는 연구 논문일 경우 중복 계산하였다.

는 경향이 있지만, 대구 2·28 연구는 늘어나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편, 최근 2년 동안(2021~2022년)에 12편이나 출간되었다. 2000년 이후 발간 논문의 누적 총수는 대구 2·28 연구가 27편으로, 대전 3·8 연구 10편, 마산 3·15 연구 16편 보다 훨씬 많다.

2000년 이후 2·28에 대한 연구 성과가 다른 지역보다 많고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는 이유는 기념사업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연구자의 학문적 열정 때문이다. 기념사업회는 총 27편 논문 중 13편에 연구비를 포함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27편 중 22편이 대구경북 소재 대학의 연구자들이 저술하였다. 상당 수 논문은 매년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했던 원고를 수정하여 등재(후보) 저널에 투고한 결과였다. 지역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민주운동에 대해 해당 지역의 관련 조직이 지역 연구자를 학술적 네트워크로 조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기념사업회는 이런 학술적 조직화에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학술지 발간 논문은 아니지만, 1960년 민주적 저항의 지역사를 총합하는 독자적 역사 쓰기가 서로 확산과 경쟁의 현상을 보이는 점이 흥미롭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행과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자치단체(장)과 지역 연구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광주에서 1995년에 『호남 4·19 30년사』가 먼저 출간되자 대구의 2·28민주의거40주년특별기념사업회는 2000년에 『2·28민주운동사』를 3부작으로 발간하였다. 이에 자극 받아 마산의 3·15의거기념사업회가 2004년에 『3·15의거사』를 간행하였다.<sup>4)</sup> 대구 2·28 관련 인사에 따르면 1960년 항쟁의 지역도시들은 학술대회, 기념 건축물 및 기념사업회 설립, 국가기념일 제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경향이 있다.

## II. 2·28민주운동 연구의 세대별 변화와 특징

학문적 연구는 연구자의 학문적 의지와 열정 이외에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 담긴 기회 구조, 분위기, 제도적 유인, 권력구조, 연구 주체 간 경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는 연구의 침체기와 부활, 3개의 연구 세대로 나누어 살펴본다.

---

4) 정근식, “지역의 4월혁명: 시각과 연구방법”,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지역에서의 4월 혁명』, 서울: 선인, 2010, p.22.

## 1. 1961년~1980년대 : 연구의 침체기

먼저 1960년 2·28과 4월혁명이 권위주의 정부를 붕괴시킨 후 1980년대까지 2·28 연구가 침묵을 강요받았던 역사적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1년 2·28 1주년 기념식을 전후하여 대구 지역 학생, 언론, 시민들의 지원으로 2·28기념탑 건립 모금운동이 벌어졌고 1962년 4월 명덕로타리에 완공되었다. 지역사회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1965년 5주기 기념식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기념사업은 민주적 저항과 의거의 기억을 지속 복원함으로써 시민을 인지적, 실천적으로 동원하는 운동형 기념사업이었다.<sup>5)</sup>

그러나 1966년에 지역 내 언론과 학생들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2·28 정신을 적극 지원하던 영남일보의 정부 비판적 논조가 바뀌었다. 2·28에서 4·19로 확산되는 과정에 북한 공산당의 개입을 주장하는 기고문이 실려 파장을 일으켰다. 1961년 쿠데타 이후에도 몇 년간 남아있던 학생들의 정부 비판적 분위기와 기념식 조직화는 침체하기 시작했다. 당시 학생 주도의 기념식에 대해 기념사업회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sup>6)</sup>

“1966년 2·28민주운동 제6주년에 즈음해서 2·28운동의 기념화에 다소의 변화가 생겼다. 이는 대구지역 시내고등학생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2·28민주운동 제6주년 기념식에서 학생들은 ‘학생들의 본분을 지켜 자유를 수호하자’는 선언문과 ‘앞으로 순수한 학생운동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선언문과 결의문은 정부의 반공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더욱이 1965년 4월에 대구를 비롯한 전국을 휩쓴 굴욕외교반대 시위와 같은 현실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비취진다. (중략) 1965년 이후 1971년까지 2·28민주운동기념식 마저 제대로 거행하지 못하는 등 기념사업이 지리멸렬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략) 2·28민주운동의 쇠잔(衰殘)기였었다.”

2·28과 4·19, 민주당 정부를 거치면서 급진화, 정치화되었던 고등학생들이 1960년대 후반 동원의 주기상 쇠락하는 모습을 보인다.<sup>7)</sup> 군부권위주의체제에서 대구 2·28정신이 희석되는 과정이었다. 정부의 규율에 시민사회가 위축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박정희정부의 대응이다. 1962년 4·19 2주년 기념사에서 박정희는 “5·16혁명은 4.19의 거의 연장”이

5) 기념사업의 특성에 따른 4개 유형(정부형, 자율형, 운동형, 민관협동형)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홍성태, “4월혁명 기억의 제도화와 사회적 결과,” 한국민주주의연구소,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선인, 2010, p.691.

6) 기념사업회, 2010, 앞의 책, pp.198-199.

7) 민주화 시기에 사회집단(성직자, 예술가, 학생, 교수, 지주, 산업가, 노동자, 중산층 등)이 상이한 동원의 주기(cycle of mobilization)를 가진다는 분석은 다음을 참조.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pp.26-28, 49-56.

라고 규정하고 103명을 의거유공자로 포상했다.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했던 1979년 19주년 기념식에서도 4·19의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부총리가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하였다.<sup>8)</sup>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쿠데타 역시 이승만 독재에 저항했던 2·28 정신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과 기억의 주체가 참여세력과 시민사회에서 군사정부로 전도되었다. 운동형 기념사업이 정부형으로 전환되었다. 결정적인 것은 1972년 국가비상사태와 유신정권 선포로 옥외집회가 전면 금지되면서 한국 권위주의가 공고화되었다는 점이다. 2·28을 기념하거나 학술연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행까지 2·28 기념과 연구는 암흑기에 접어들었다.<sup>9)</sup>

## 2. 1990년대 : 2·28 주역의 조직화와 지방자치제

그 동안 숨죽여 지내던 2·28 참여자들은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사적 모임 형태로 등장하였다. 1990년 2월 2·28기념탑을 두류공원으로 이전하면서 2·28 참여 주체였던 몇몇 고등학교 동기회장 중심으로 2·28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발족했다. 2·28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 정신을 체화한 인물들이 침묵과 억압의 시절을 지나 비로소 현실태로 복원되는 시점이었다. 마침 1991년 지방의회선거,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하면서 대구 시장과 행정 관료, 시의회는 2·28과 기념사업회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기 시작했다.<sup>10)</sup>

왜 지자체는 다른 민간단체나 운동단체가 아닌 기념사업회를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첫째 2·28 주역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겐 협력하기에 부담이 덜한 대상이었다. 1987년 민주 항쟁을 이끌었던 지역 대학생, 유가족회, 비공식 투쟁 조직은 여전히 1990년대에도 정부에 저항하는 비판적 세력이었기 때문에 지방 행정관료에겐 부담되었다. 반면에 50년간 숨죽여 지냈던 2·28 참여자들이 1990년대 기념사업회를 조직했지만 이들은 이미 나이 든 지역 명망가였고 이들의 투쟁 대상은 머나먼 과거의 이승만정부였다. 게다가 기념사업회는 정관에 ‘정치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지방정부 입장에

8) 정근식, 2010, 앞의 논문, p.25.

9) 기념사업회, 2010, 앞의 책, p.199.

10) 김태일, “2·28민주운동 구술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 22인의 경험과 기억』, 대구: 기념사업회, 2018, pp.7-8. “(2·28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민주화와 지방화가 추진된 이후에야 생겨났다. 민주화와 지방화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였다. 각 지방은 자신이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의식이 생겨났고, 그리고 자기 지방의 자랑스러운 점을 찾아서 그것을 선양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역발전의 동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체성이란 자신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려는가에 대한 답이다. 대구에서도 민주화와 지방화 과정에서 이런 노력을 했고, 2·28에 대한 관심도 그 일환으로 생겨났다.”

선 2·28주역들은 정치적으로 안전한 협력 대상이었다.

둘째 2·28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선 대구를 민주주의적 자치공동체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었기 때문에 곧 대구의 지역적 정체성으로 자리를 잡았다.<sup>11)</sup> 1960년대 전반 학생 주도의 운동형 기념사업이 35년간 침묵 후에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라는 기회구조의 개방으로 인해 민관협동형 기념사업으로 안착하였다. 대구시장은 2·28이 갖는 민주적 저항 의식을 지역 사랑과 지역문화 발전으로 연결시켰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2·28의거 정신을 받아 시민 여러분의 가슴에 꿈을 심는 ‘대구사랑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구사랑운동은 ‘대구지키기’ 운동에서 출발하여 ‘대구키우기’ 운동으로 승화시켜 (중략)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키워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길이 바로 2·28의거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sup>12)</sup>

2·28이라는 기억의 실천이 초기 운동형에서 민관협력형으로 변화하는 것은 대구 외에도 전국적으로 동일했다. 5·18재단(광주, 1994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산, 1994년), 3·15의거기념사업회(마산, 1995년),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대전, 20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서울, 2001년) 등이다.<sup>13)</sup> 민관협력형을 통해 국가는 1960년 민주적 저항의 기억과 상처를 인정하고 이를 공적, 제도적 공간으로 포용하였다. 당시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이 가능해지고 비로소 공적 담론과 학술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 3. 1990년대 1세대 연구: 회고적 기억과 직관

1990년대 1세대의 2·28 담론은 자연스럽게 기념사업회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초기 (1991~1994년)에는 기념사업회 주최 기념식을 통해 2·28을 회고와 결의 수준에서 복원하였다. 학술적 담론을 형성하는 심포지엄은 1995년 기념사업회가 주최한 35주년 기념식에서 최초로 나타났다.<sup>14)</sup> 조동걸은 학생운동의 특성으로 순수성, 종합성, 진보성을 지적하고 2·28을 고교생이 중심이 되어 4·19혁명을 촉발했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했다. 윤식

11) 필자가 보기에, 2·28과 4·19의 이념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통일)라 할 때, 대구광역시 2·28에서 민족 통일을 제외한 민주주의 정신을 채택하였고, 누락된 민족주의 정신은 국제보상운동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12) 기념사업회, 앞의 책, 2021, pp.217-218.

13) 홍성태, 앞의 글, pp.692-693.

14) 기념사업회, 앞의 책, 2010, p.207.

은 2·28이 식민시기 지역 내 항일 독립운동의 후예로 평가한 후 중년이 된 2·28세대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자고 권유했다.<sup>15)</sup>

1997년 기념사업회가 발간한 기념문집은 2·28 주역들의 오랜 기억을 시와 수필 형식으로 담고 신문기사, 기념사, 축사 등을 추가했다. 1999년 학술회의에서는 노명식의 ‘세계화시대의 2·28정신’, 성유보의 ‘2·28민주의거와 4월혁명의 이념적 연계’, 이대우의 ‘2·28민주의거의 세계학생운동사에서의 위상’, 김정길의 ‘2·28 민주의거의 이념과 시민운동’이 발표되었다.<sup>16)</sup> 1세대 연구는 역사적 자료와 기록에 대한 꼼꼼한 분석은 없었고 5~10페이지 정도 체험자들이 직접 작성한 직관적 발제, 회고적 평론 수준에 머물렀다.

#### 4. 2000년대 2세대 연구: 젊은 연구자의 본격 연구

2000년대 기념사업회는 학술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2·28민주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회보 『2·28의 횃불』을 발간하였다. 진지한 학술연구의 출발은 2000년 발간된 3부작 『2·28민주운동사』의 1편 사론편(史論篇)이었다. 학문적 전문훈련을 받은 대학 교원 5명의 야심찬 노력으로 5편의 논문이 일관된 질서와 역할을 가지고 발간되었다. 사론편이 2·28 연구담론에 기여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표준화이다. 김태일의 문제의식은 ‘역사적 사건을 어떤 용어로 불러 올 것인가’였다. 2·28을 호출하는 용어가 데모, 가두시위, 봉기, 의거, 학생의거, 민주주의거 등으로 혼란하다고 지적했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다. 역사적 사건을 지칭·호출하는 특정 용어는 호출자의 관념과 이데올로기가 내장된다. 예컨대 의거는 ‘의(義)에 입각해 일어선다’는 의미로 일회성, 즉자성이란 뉘앙스를 가진다.<sup>17)</sup> 김태일은 2·28의 이념, 주체, 투쟁방식을 꼼꼼히 분석한 후 ‘민주운동’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sup>18)</sup> 이후 기념사업회는 40주년부터 2·28민주의거를 2·28민주운동으로 공식 용어를 바꾸었다.

둘째 기억과 회고, 느슨하고 산발적인 논평이 많았던 1세대 담론과 달리, 이들은 2·28의 주요 이슈를 질서 있는 시계열적 논리로 구성했다. 사론편은 ① 2·28의 연구 서설, ② 대구에서 발생한 배경과 원인, ③ 이승만정부의 붕괴로 이르는 전개 과정, ④ 4·19 이후 2·28 운동의 지속적 변화 과정, ⑤ 역사적 의의와 현재적 계승으로 구성되었다. 흥

15) 조동걸, “2·28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의 반성,” 윤식, “대구사회와 2·28세대의 역할과 과제,” 기념사업회, 2022, 앞의 책, pp.17-33.

16) 기념사업회, 앞의 책, 2000, pp.209-214.

17) ‘의거’가 갖는 용어의 의미와 뉘앙스를 비판하면서 ‘혁명’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은 다음을 참고. 박태순, “4·19의 민중과 문학”, 『4월혁명론』, 서울: 한길사, 1989, pp.263-297.

18) 김태일, 앞의 논문, 2000, pp.46-47.



미흡케도 이러한 구성과 키워드 설정은 후속세대의 2·28 관련 학술 논문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형식이다. 사론편은 후속 연구자들의 내러티브를 안내하고 규정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다.

셋째 2·28이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적 저항운동이며 서울의 4·19를 촉발했다는 ‘선도성 테제’를 확립했다. 1960년 민주운동은 대구에서 출발하여 대전, 마산,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사실 1,200여명의 2·28 대구 시위, 1만여 명이 참여했던 3·15 마산 시위, 2만여 명이 참여했던 4·11 2차 마산의거 등이 잇달아 일어났을 때 서울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없었다.<sup>19)</sup> 4월 18일 고려대생의 대규모 시위가 처음이었다. 그러나 서울이란 지역이 갖는 독점적 중앙정치의 공간성 때문에 ‘서울의 4·19’라는 특정한 시점에 역사적 의미가 집중되었다. 2000년대 대구의 2·28 연구자들이 이러한 중앙-지방의 이분법을 극복하는 이론적 명분과 수단은 선도성 테제였다. 2·28 주역들이 부산, 마산으로 다니면서 지역 학생들을 만나 대구의 상황을 전파하고 민주항쟁을 확산시켰던 사실이 밝혀지면서<sup>20)</sup> 선도성 테제는 더욱 힘을 받았다.

2세대 연구그룹은 2·28 주역 혹은 당사자가 아닌 새로운 젊은 연구자라는 세대적 특징을 가진다. 기념사업회의 대대적인 지원으로 구성된 『2·28민주운동사』 3부작의 편찬위원회는 의도적으로 신세대로 집필진을 구성하였다. 60세 전후의 2·28 주역들의 회고적 평론을 넘어 대학 연구자들이 연구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에 대해 편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40주년 특별사업기념회 편찬분과위원회에서는 2·28 정사 집필계획을 세웠다. 선정기준은 ...(중략)... 젊은 연구자라는 기준이었다. 이런 기준을 생각한 것은 2·28이 대구경북 정신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자 한다면 젊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구를 축적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다. 경륜의 미숙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미래지향적 생각으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를 선정하였다.”<sup>21)</sup>

## 5. 2010년대 3세대 연구: 연구의 르네상스

2010년대부터 등장하는 3세대는, 2010년 이후 2022년까지 25편의 논문을 출간할 정

19) 이완범, “4·19 전조로서의 1960년 초봄 지역 시민운동”,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권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3, p.67.

20) 이은진, “3·15 마산 1차의거 누가, 왜 참여하였는가?”,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학술논문 총서』, 2010, pp.159-161.

21) 김태일, 앞의 논문, 2000, pp.46-47.

도로 연구의 르네상스를 만들었다. 이들 연구의 내러티브는 다음 3가지 경향을 보인다.

첫째, 2세대가 제시한 ‘배경-원인-전개과정-결과-현재적 의미’라는 시계열적 플롯을 따라 기존 연구 성과를 보다 풍부하게 재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플롯은 2010년 이후 발간된 논문 총 25편 중 12편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예컨대 배규성은, 2·28에 대한 자신의 논지를 배경-전개과정-파급효과의 목차에 따라 서술한다. 논문 말미에 그는 새로운 평가, 즉 2·28정신이 59년간 침묵한 이유를 추가한다. 학생운동의 단편적 조직성, 사망자 부재와 극적 요소의 결여, 2·28 주역의 소극적 퇴장, 기념사업회의 늦은 발족을 거론한다.<sup>22)</sup>

두 번째 경향은 2·28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새로운 관점과 문제의식(휴식권, 전태일정신, 전통사상 등)으로써 결의문을 재해석하는 논문이 두드러진다. 안도현에 따르면, 기존 연구자들은 당시 고교생의 일요일 등교 거부를 자유당의 부정 선거 책동에 대한 민주적 저항으로만 좁게 해석한다. 그는 일요일 등교 문제의 핵심이 생존적 기본권인 ‘쉼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휴식권 관련 독일 사례(기본법, 폐점법, 개점법,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등)를 한국 사례(대통령령,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등)와 비교한다.<sup>23)</sup> 정재요와 서보건 역시 결의문에서 휴식권 개념을 추출한다. 정재요는 2·28이 주장한 휴식권이 1970년 전태일이 외친 “쉼 권리를 보장하라”와 일치한다고 본다. 그는 2·28 결의문과 전태일 수기를 비교한 후 휴식권이 한국 정당 강령과 사법 판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sup>24)</sup> 서보건은 결의문의 ‘쉼 권리’는 ‘노동 후의 휴식’보다 상위의 개념인 인간 기본권이라 주장하면서 법 체계적 분석을 시도했다.<sup>25)</sup>

결의문의 재해석 시도는 다른 연구에서도 반복된다.<sup>26)</sup> 최병덕은 경북정체성포럼이 유교적 기반에서 경북의 지역 정체성으로 제시한 ‘올곧음’(정의 正義), ‘나아감’(창신 創新)을 결의문에서 추출한다. 그는 2·28정신을 과거의 전통사상(유교, 화랑정신, 선비정신)과

22) 배규성, “대구 2·28민주운동: 지역적 의미와 계승”, 『국제정치연구』, 14집 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 pp.101-124.

23) 안도현, “2·28민주운동과 ‘쉼 권리’: 결의문에 담긴 일요일 등교 거부에 대한 재해석”, 『대구경북연구』, 20권 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pp.43-65. 안도현, “쉼 권리 논의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의미: 제도적 차원과 운동적 차원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0집 1호, 대한정치학회, 2022, pp.49-72.

24) 정재요, “2·28정신과 전태일 정신의 현대적 재조명: 쉼 권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4집 3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pp.1-30.

25) 서보건, “인간의 권리로서 쉼 권리(휴식권)와 2·28민주운동 결의문”, 『민족문화논총』, 80권 1호,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2, pp.181-215.

26) 결의문 외에 2·28 직후 발간된 참여 고교생의 교우지와 문집을 텍스트 분석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안도현, 변영학,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 연구: 2·28민주운동 직후 발행된 교우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1권 3호, 대구경북연구원, 2022, pp.1-29.

현대적 과제(세계화, 지역주의, 지역 발전 등)를 잇는 매개체로 파악했다.<sup>27)</sup> 김일수는 결의문과 구호의 작성 과정을 상술한 후,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신세대가 정치적 동원과 선전의 도구에서 벗어나는 주체적인 과정을 드러낸다.<sup>28)</sup> 채장수는 알튀세(Louis Althusser)의 징후적 독해(symptomatic reading) 방법을 이용하여 2·28 결의문 배후에 존재하는 침묵의 언어를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8은 고교생의 행동과 언어 뒤에 피 지배층의 일반민주주의적 의지가 표출된 사건이며 이는 도시와 농촌이 결합한 민주적 저항이었다.<sup>29)</sup>

세 번째 경향은, 2·28과 1960년 분석이 아니라, 기억과 기념이라는 키워드로써 2·28을 현재적 시점에서 통찰하는 내러티브의 등장이다. 사실 1960년 2·28을 40년이 지나 2000년대에 학술적 대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기억의 학문적 복원일 수 밖에 없다. 2·28 주역과 지역 학자들이 2·28 정신으로 대구 시민을 인지적, 실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기념과 교육의 행위이다. 이에 기념사업회의 정기 발간물인 『2·28 햇불』 2015년 좌담회에서 기억의 저장, 의미의 재구성, 시민적 공유를 새로운 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sup>30)</sup> 기념사업회의 ‘2·28민주운동 아카이브’ 구축 사업으로 구술집 『2·28민주운동: 22인의 경험과 기억』이 2016년 발간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sup>31)</sup>

사실 기억·기념의 연구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인문학계의 변화를 한국이 수용한 결과였다. 1980~90년대 탈냉전과 민주화 물결로 인해 전후 미소 대립의 무게에 눌러 있던 다양한 이슈(과거사, 학살, 민족/인종/다문화, 종교분쟁, 불평등, 젠더, 인권 등)가 새로운 연구 주제로 부상했다. 특히 소수자 집단의 억압과 같은 냉전 시대의 어두운 기억을 복원하고, 정사(正史)에 가려졌던 약자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구술사 연구도 부상했다. 한국 학계에도 과거사의 기억과 선택적 망각, 현재적 의미의 기념과 교육이 인문사회 분야에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정래필은 2·28의 문화적 기억(김윤식과 하청호의 시, 주역들의 구술, 뮤지컬 극본 등)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2·28 기억을 보편적이고 전국적 기억으로 승화시킬 프로젝트를

27) 최병덕, “전통사상적 관점에서 본 2·28민주운동 결의문의 정신과 의미”, 『대구경북연구』, 20권 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pp.1-25.

28) 김일수,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본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지향”, 『대구경북연구』, 20권 2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pp.111-131.

29) 채장수, “2·28결의문의 민주주의적 독해”, 『대구경북연구』, 21권 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pp.27-43. 유사한 논지의 2004년 논문은 다음을 참조. 채장수, “2·28 대구민주운동의 의미론: 민주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1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04, pp.119-139.

30) 박승희, “2·28민주운동의 기억과 기념 방식”, 『영남학』, 75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p.267.

31) 기념사업회, 2018, 앞의 책, p.4.

제안한다.<sup>32)</sup> 박승희는 2·28 주역들이 제시하는 “기억의 조각을 조합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역사가 될 수 없”으며 기록(선언문, 비문, 시, 구호 등)은 1차적 언어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2·28기념회관은 일종의 역사적 사건을 성전화(聖殿化)하는 전통적인 메모리얼 방식에 머물러 있다. 기억의 공간을 관객과 시민과 공유하는 방법으로 2·28이 발생했던 공간(예컨대 반월당)의 재구성, 이벤트, 전시 콘텐츠, 시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제시한다.<sup>33)</sup>

몇몇 연구자는 2·28을 시민교육에 접목한다. 정재요는 1976년 독일에서 등장한 정치교육의 지침인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의 내용(강제성 금지, 논쟁성 유지,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를 소개한다. 그에 따르면, 2·28 당시 고교생들의 모임, 토론, 결의, 쫓기는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정신과 일치한다. 계몽된 정치교육의 상징이자 교육적 자원으로 2·28을 교실 안에서 설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sup>34)</sup> 김영하는 2·28 기념사업을 광주, 부산의 민주운동 기념사업 및 지방정부 조례 제정 운동과 비교한다. 그는 2·28 연구교육원 설립, 기념사업회-지방정부-시민단체-학교 간 네트워킹, 교육청의 지원, 2·28정신을 담은 교과서 개정 및 교재 개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백일장, 웅변대회, 토론대회 등)을 제시한다.<sup>35)</sup>

전체적으로 볼 때 1990년대를 전후한 정치사회적 변동(민주화, 지방자치)에 따른 연구의 기회구조가 연구담론을 활성화시켰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와 달리, 지역민이 선출한 지자체 단체장들은 업적 관리를 위해 지역의 역사와 유산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려 한다. 민주화와 지자체의 결합 효과는 민관협력형 민주화 기념사업, 과거사 연구, 근현대 지역사료의 정리·수집에 불을 일으켰다. 또한 기념사업회, 학술진흥재단, 대학교 등 기관이 제공하는 연구비 역시 전문연구자와 교수를 지역사를 안정적으로 연구하는 원동력이었다.<sup>36)</sup>

32) 정래필, “문화적 실천 관점에서 본 지역 기억의 생성력”, 『국어교육연구』, 78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22, pp.319-345.

33) 박승희, 앞의 글, pp.265-295.

34) 정재요, “2·28민주운동 서사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고찰: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0집 1호, 대한정치학회, 2022, pp.171-194.

35) 김영하,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중등교육연구』, 64권 2호, 경북대 중등교육연구, 2016, pp.337-366.

36) 양정필, “근현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문제연구』, 17권, 역사문제연구소, 2007, pp.12-14.; 강순애,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활용”,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권 2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pp.40-41.

### Ⅲ. 2·28민주운동 연구의 주요 쟁점

2·28연구담론은, 주로 대구경북의 2·28주역들과 대학 연구자들이 2·28 기억을 복원·연구·기념·교육하려는 노력과 지자체가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요구가 만나서 형성되었다. 동질적이고 응집력 있는 인식공동체가 연구담론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연구 담론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3가지 상이한 결이 보인다.

#### 1. 2·28정신의 기원: 내재적 전통 혹은 외삽적 단절

2세대 연구자 윤순갑은 1960년 2·28은 대구란 공간에서 과거와의 연속성을 지향했던 것인지 아니면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변화를 선언했던 것인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한다.<sup>37)</sup> 2·28정신이 전통적 정신의 후예인지 혹은 새로운 사회운동인지에 대해서 연구공동체 내에 결이 다른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먼저 내재적 전통론에 속하는 학자들은, 독재와 불의에 저항한 2·28정신이 전근대 한국사, 특히 대구경북이란 특정 지역에서 일관되게 내려온 선비정신, 위민정신, 학생운동의 후예로 본다. 윤식은 2·28정신을 일제하 1919년 2.8독립선언운동, 3·1학생운동, 1926년 6·10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해방 후 반탁학생운동의 연장선으로 제시한다.<sup>38)</sup> 이대우 역시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던 국채보상운동, 광복회, 3·1운동, 임시의용승군, 의열단, 신간회 대구지부 등 민족주의적 저항정신의 계승자로서 2·28을 설정한다.<sup>39)</sup> 특히 전통사상 연구자인 최병덕은 신라 화랑도와 영남 선비문화에서 올곧음(정의, 正義)과 나아감(창신, 創新)을 추출하고 이것이 1960년 호국정신과 민주화운동으로 표출되었다고 본다.<sup>40)</sup> 홍종흠 기념사업회 고문은 삼국통일의 신라정신이, 홍덕을 전 대구대 총장은 구국의병, 국채보상운동, 산업화 정신이 2·28 정신의 기원이라고 주장한다.<sup>41)</sup>

반면에 단절론은 2·28이 전근대적 전통과 무관한 전혀 새로운 운동이라고 본다. 김태일에 따르면, 2·28은 50년대 도시화, 실업율 증가, 근대교육의 확대, 대중매체의 발달과

37) 윤순갑, “2·28민주운동과 대구정체성”, 『대한정치학회보』, 26집 4호, 대한정치학회, 2018, p.168.

38) 윤식, “한국 학생운동의 정신사적 재조명”, 『2·28민주주의의 역사성과 세계성』, 2·28민주주의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000년 2월 25일), pp.1-17.

39) 이대우, “대구경북민족민주운동과 2·28의거”, 위의 책, pp.5-7.

40) 배규성, 앞의 논문, p.112. 최병덕, 앞의 논문, pp.11-19. 전통사상이 아닌 서구 공화주의의 계승으로 2·28정신을 재해석하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 김용호, “공화주의 시각에서 2·28민주운동을 재조명한다”, 기념사업회, 앞의 책, 2021, pp.337-360.

41) 최병덕, 앞의 논문, p.14.

같은 사회구조의 변동에 따라 새롭게 성장한 근대적 사회세력(학생, 지식층)이 만들어 냈다.<sup>42)</sup> 특히 미국식 교육 제도의 도입과 확산은 에릭 홉스봄이 ‘교육의 기적’이라 부를 정도였다.<sup>43)</sup> 중·고등·대학생 수는 단기간(1953~1968년)에 최대 22.4배로 증가했다. 당시 국제개발학회(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개도국 도시 사례로서 대구를 조사한 결과보고서는 대구가 서울, 부산과 함께 교육의 도시로서 중고등 교육기관의 양적 질적 수준은 매우 높았다고 기록했다.<sup>44)</sup> 중고등 교육과정과 언론매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규범을 시민, 특히 도시의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전파시켰다. 이들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 선거 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현상이 2·28이라는 것이다.<sup>45)</sup>

한국 최초의 보통선거권에 의한 선거였던 1948년 5·10선거에서 1960년 4·19까지 불과 12년 밖에 안되는 시간이 걸렸다. 최장집은, 민주주의 제도로서 구성된 최초의 정부가 선거 규칙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시민봉기와 같은 사태로 붕괴된 사례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는 짧은 시간 내에 한국 사회에 서구의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강력한 정치적 규범이자 가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sup>46)</sup>

“교육받은 도시 중산층, 특히 그 가운데서도 학생, 교사 및 교수, 대중매체의 언론인, 문필가 등 전후 세대라 할 수 있는 사회집단이 중심을 이루었다. 즉 이들은 분단국가의 수립을 둘러싼 좌우투쟁에 참여하였던 세대들이 아니라, 분단국가 수립 이후 전쟁을 사이에 두면서 앞 세대들과 단절된 새로운 세대들로서 그들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정치적 이념, 가치 정향 세계관을 갖는 사회집단들이었던 것이다. 전후 분단체제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사회와 학교에서 교육되고 사회화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이념을 수용하면서 내면화한 세대들이었다.”<sup>47)</sup>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내재적 전통을 중시하는 접근은 향토사적 내러티브가 강한 편이다. 연구자들은 문헌 초반부에 ‘2·28 정신은 어디서 오는가’를 물은 뒤 영남지역의 문

42) 김태일, “4월혁명의 출발: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pp.248-251.

43) Hobsbawm, Eric, *The Age of Extremes: A History of the World, 1914~1991*, New York: Vintage Books, 1994, p.297.

44) 국제개발학회의 대구 보고서(*A City in Transition: Urbanization in Taegu, Korea*)는 다음 번역본을 참조. 이만갑, 허버트 R 베린저, 『전환의 도시 대구』, 대구: 양서원, 2012, pp.436-437.

45) 유명철,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혁명: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 지도의 필요성,” 『사회과교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8, p.63. 이 논문에서 저자는 ‘왜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먼저 시위하였나’를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분석한다.

46)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1996, p.23, pp.159-160.

47) 최장집, 위의 책, p.90.

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챕터를 배치한다. 대구경북이란 특정 공간에서 발생했던 다수의 역사적 사건(예컨대 국채보상운동)이나 현상(예컨대 영남 유럽정신)을 2·28과 함께 하나의 시계열 고리로 묶는다. 이들 저작은 2·28을 분석하더라도 사실 학술적 의미는 종종 현재적 시점, 즉 대구경북의 정체성 확립에 더 관심이 많은 편이다.

이와 달리 단절론적 연구자들은 2·28을 분석해야 할 하나의 단일 사례로 집중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연구시기를 대체로 1950년대부터 잡는다. 2·28 정신의 기원은 전통 사상과 무관하게 해방 후 국민형성 과정에서 나온 전혀 새로운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sup>48)</sup> 단절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외삽적으로 설정한 후에 교육기관과 언론, 야당이 민주적 규범을 확산시켰다. 또한 토지개혁과 한국전쟁을 통해 전통사회의 유교적 규범이 소멸되고 근대적 합리주의, 자유주의가 확산되었다. 미군정, 토지개혁, 한국전쟁, 교육 확산으로 한국인의 정치적 규범과 가치 정향은 전근대적 전통과 단절되어 새로 시작했다고 믿는다. 시인 고은이 말했던 것처럼 1950년대 한국 사회는 모든 것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때였다.<sup>49)</sup>

## 2. 2·28의 주체와 성격: 학생, 도시, 농촌, 혹은 민중

대구의 2·28 연구공동체는 1960년 민주항쟁의 주체와 성격에 대해 결이 다른 해석과 주장을 제시한다. 이들의 내러티브는 다음 4가지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 1) 고등학생의 조직화와 정치화

유명철과 김일수는 고등학생을 단일한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이들이 대학생과 다르게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집단행동의 논리를 미시적으로 추적한다. 유명철은 꼼꼼한 4월 혁명 일지를 분석한 후, 고등학생이 대구 2·28, 마산 3·15(1차 의거), 마산 4·11(2차 의거)를 주도하였으며 4·19는 대학생이 주도하였다고 본다. ‘한국의 모스크바’였던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먼저 시위에 나선 이유는, 고교생들은 학도호국단과 그 산하 학생위원회라는 조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호국단은 이승만 정부의 관계 데모에 자주 동원되었는데 학생들은 이 조직에서 배운 데모의 방법을 이용하여 거꾸로 부정선거에 저항했다. 실제로 대부분 참여 고교의 학생위원장과 부원장은 학생위원회를 이용하여 시위를 조직하였다. 사실 2·28 참여 고등학교의 학생 간부들은 그 이전 방학 중 연합수련회를 통해 이미

48) 영남지역이 한국전쟁에서 미점령 지역이었기 때문에 대구가 정치적 비판의식이 높았다는 점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기념사업회, 앞의 책, 2010, pp.132-133.

49) 고은, 『1950년대』, 서울: 청하, 1989.

서로 친숙한 관계에 있었다.<sup>50)</sup> 시위의 조직화 비용을 낮추는 이러한 경험은 고등학생들이 의외로 민주항쟁을 주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

반면에 대학생들은 고교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느슨했다. 그들은 고교생처럼 휴일에 자유당 유세장에 동원되거나 평일 민주당 유세장 참여가 금지되지 않았다. 고교생과 대학생은 단일한 학생집단이 아니라 집단행동으로 나서는 조직화와 유인에서 서로 달랐던 것이다. 실제 고교생과 대학생의 갈등은 심각했다. 2·28 이후 4대 국회 해산 운동과 1주년 기념행사 준비에서 중·고교 대표는 대학생 대표의 정치적 온건주의를 비난했다.<sup>51)</sup>

김일수는 2·28 이후 대구 고교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학생(특히 고려대 4·18 시위와 깡패 피습)을 주체로 설정하는 서울 중심의 4·19 내러티브와 달리, 대구의 고등학생은 2·28부터 4·19를 지나 5·16 쿠데타까지 일관되게 열정적인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학도호국단 폐지, 자치학생회의 건립, 어용교사 및 부패재단 정화, 교원노조 지지 등 학원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다. 이승만 정부가 붕괴된 4·19 이후에도 4대 국회 해산 요구, 반혁명인사 규탄, 교사(校舍) 반환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 장면 정부의 2대 악법(데모규제법, 반공법) 반대, 민족통일운동을 주도하였다.<sup>52)</sup> 고교생들은 애초의 학생운동을 넘어 정치화되고 의식수준이 완성되어 갔다는 것이다.

## 2) 도시 학생·지식집단의 자유주의

2·28의 주체와 성격에 대해 상당수 연구자들은 도시 부문의 학생, 지식인이 주도한 자유주의 혹은 민주주의적 저항이라 해석한다. 그 주체는 ‘학생과 언론, 시민의 연대’, ‘대학-언론연합(university-press nexus),’ ‘학생과 지식인들의 집단 행위’, ‘도시-학생-언론이 주도한 시민적 정치혁명’ 등으로 표현된다.<sup>53)</sup>

이들 연구에 따르면, 노동자는 주요 세력이 아니었다. 비록 1956년 대구 대한방직 노동쟁의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발족하고 1960년 5월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지구 단위의 교원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전국교원노조로 발전하였지만, 1960년

50) 유명철, 앞의 논문, 2018, pp.63-64.

51) 김일수, “2·28민주운동의 인식변화와 4·19혁명으로의 계승”, 『민족문화논총』, 79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21, pp.969, 974.

52) 김일수, 위의 논문, pp.965-985.

53) 김태일, 앞의 논문, 2003, p.257. Lee, Hahn-Been, *Korea: Time, Change, Administration*, East-West Center Press, 1968, p.126. 최장집, 앞의 책, 1996, p.90.; 박명립, “제2공화국 정치균열의 구조와 변화”,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나남, 1996, p.236.



을 움직인 주도적 집단은 아니었다. 1960년 시점은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전이며 ‘산업화 없는 도시화’로 인해 도시 노동부문이 권위주의정부에 위협적이거나 사회운동을 주도할 세력은 되지 못했다.

1960년 도시와 농촌 인구는 각각 총인구의 28.0%, 72.0%였고, 농업 종사자는 약 60%였을 정도로 압도적인 농업사회였지만<sup>54)</sup> 농촌이나 농민이 1960년 민주항쟁에서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김태일은 토지개혁의 효과를 제기한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토지개혁으로 인해 자작농가 비율이 1945년 14.1%에서 1959년 80.1%로 급증했고 수천년 한국사를 지배했던 지주계급은 몰락하였다.<sup>55)</sup> 국가(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결행한 토지혁명의 최대 수혜자는 농민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전 기간 동안 한국의 농민들은 한번도 자주적 조직을 만들어 보지도 않았고 국가권력에 저항하지 않았다.”<sup>56)</sup> 농촌부문은 제2공화국에서도, 5.16 군사쿠데타에서도 저항하지 않았다. 이승만 정부시기에 유권자 배열은 압도적으로 여촌야도(與村野都)였으며 농민들은 권위주의 정부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1960년 민주운동은 도시부문의 학생, 지식인이 주도하여 권위주의에 저항했던 도시 돌파(urban breakthrough)로 해석한다.

이러한 주장은 배링턴 무어(Barrington Moore, Jr)나 제임스 커스(James R. Kurth)의 이론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교역사사회학자 무어는 산업화로 등장한 패권적 부르조아지(conquering bourgeoisie)가 자유주의를 주장할 때 그 기반이 안정적이라고 보았다. 각국 산업화와 정치변동의 연관성에 천착했던 정치경제학자 커스는 19세기 초반 동유럽 사례 연구를 통해 산업화 이전에 지식집단(학생, 교수, 법률가, 언론인 등)이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그 사회적 기반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랑헤르(William L. Langer)의 말을 빌리면, 지식인의 자유주의는 제조업자의 자유주의보다 허약하다.<sup>57)</sup> 2·28과 4·19는 제조업 없는 지식인의 자유주의라는 것이다.

### 3) 농민의 녹색봉기

2·28주역이었던 이대우는 도시의 고등학생, 지식집단이 주체였다는 위의 내러티브를

54)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서울: 통계청, 1995, p.61, p.87.

55) 김태일, “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농민정치”, 한배호 편, 『한국현대정치론』, 서울: 나남, 1990, p.457.

56) 김태일, 위의 논문, p.462.

57) Moore, Jr., Barrington,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1966. Kurth, James R., “Industrial Change and Political Change: A European Perspective”, Collier, David, e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319-362. Langer, William L.,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1832~1852*, New York: Harper and Row, 1969.

전면 반박한다. 그는 2·28 민주이거 39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2·28의 주체와 성격을 ‘녹색봉기’로 규정한다. 2·28 대구학생, 4·18 고려대 데모, 4·19 서울대 데모의 주역 대다수가 농촌 출신이므로 1960년 항쟁은 농민들이 주도한 녹색봉기라는 것이다.<sup>58)</sup> 그는 2·28을 신라 농민운동, 흥경래의 난, 진주민란, 동학혁명, 3·15운동의 역사적 계보를 잇는 저항운동으로 묘사한다. 그에 따르면, 1950년대 많은 농민이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 하층민으로 전락했고 이들의 2세들이 자연스럽게 지배층의 부도덕성과 권위주의에 저항했다. 주체였던 농민 2세들이 부정선거 책동에 저항하기 위해 도시 출신 학생들에게 동맹을 요청했던 것이 2·28이었다.<sup>59)</sup>

학생집단의 저항적 도농동맹이 2·28의 주체이자 성격이라는 이대우의 주장은 2·28과 4월혁명 문헌 중에 유일하고 독창적인 접근이다. 사실 토지개혁으로 인해 선거정치적 측면에서 여촌야도, 즉 국가-농민의 보수적 동맹이 1950년대 농촌사회에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촌의 실상은 비참하였다. 토지개혁을 통해 다수가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전환되었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사회의 특성 상 농업경영 규모의 영세화가 초래되었다. 개혁 전인 1945년과 개혁 후인 1953년을 비교하면 농가의 평균 경지규모는 1.08헥타에서 0.87헥타로 줄어들고 1.0헥타 미만 농가의 비중은 68%에서 79.1%로 늘어났다. 즉 농가의 8할이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영세농이었다.<sup>60)</sup> 2·28과 4월 혁명은 농촌사회의 빈곤과 우수 학생의 도시 유학, 도시 학생과의 교류를 통해 권위주의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 4) 피지배층 전체의 일반민주주의

농업부문을 제외한 학생-언론-지식인의 도시 부문(urban sector)이 주체였다는 논리에 반하여, 이대우는 농촌 출신의 학생이 중심이 된 도농동맹(urban-rural coalition)을 주장함으로써 주체를 확장했다. 채장수는 도농동맹에서 더 나아가 2·28 주체를 피지배층 전체로 확대했다. 그에 따르면, 사회운동의 주체를 ‘실제’ 참여자로 제한하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학생들의 주장과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주체로 설정해야 한다. 즉 확장된 주체인 피지배층 혹은 민중 전체가 지배엘리트에 저항한 것이다.

58) 이대우, “2·28 민주이거의 세계학생운동사에서의 위상”, 『2·28민주이거의 시대사적 조명』, 2·28민주이거 39주년 기념학술회의(1999년 2월 26일), pp.63-5~63-6.

59) 이대우, 위의 논문, pp.63-5~63-6. 그런데 참여자의 출신은 사건이나 운동의 성격 규명에 중요한 요소이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1950~60년대 군 장교와 병사 대다수가 농촌 출신이었는데 우리는 1961년 군사쿠데타를 농민봉기로 부르지 않는다.

60) 박진도,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서울: 한길사, 1994, pp.51-52.

“피지배층이 수동적 신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주도한 운동의 주장과 가치에 동의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2·28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였던 학생들이 피지배층 대중의 일반의지(general will)를 대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시 상대적으로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피지배층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이다.”<sup>61)</sup>

2·28의 주체와 성격에 대한 연구공동체 내의 이견은 흥미롭다. 사실 기념사업회가 발간한 일종의 정사(正史)인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50년』과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60년』의 2·28 서술을 꼼꼼히 보면 위의 4가지 상이한 결이 섞여 있다. 집필자가 바뀔 때마다 내러티브가 혼재되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다. 2·28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자료 분석과 조사를 통해 밝히면 된다. 또한 1960년 2월 27~28일 이틀에 나타난 주도 세력과 성격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4월혁명 전체 기간, 민주당 집권기, 군부 쿠데타 이후까지 적어도 1960년대 전반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집단행동의 논리로 볼 때 주체와 성격은 정치균열, 기회구조의 변화와 조직 내 문제, 리더십, 단계별 이슈의 전환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를 제안하자면, ① 후안 린츠(Juan Linz)의 민주주의의 붕괴론과 귀레르모 오도넬(Guillermo O'Donnell), 필립 슈미터(Philippe C. Schmitter)의 민주화 이행론을 이론틀로 삼아 ② 사회집단별 정치적 동원·참여의 사이클과 속도, 범위를 분석하고 ③ 다른 도시(대전, 마산, 광주, 부산, 서울 등)의 사례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sup>62)</sup>

### 3. 2·28민주운동: 4월혁명의 완성 혹은 미완

대구 2·28, 대전 3·8, 마산 3·15를 포함한 4월혁명의 의의에 대한 학술 연구자나 사회운동가의 평가는 세 가지로 나뉜다.<sup>63)</sup> 첫째 4월혁명이 이승만 정부를 퇴진시키고 민주당의 집권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완성된’ 혁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평가는 현재 주류 해석이다. 4월혁명은 전후 20세기 전쟁 중 가장 끔찍했던 한국전쟁에서 소련, 중국, 북한의 압도적 군사력에 맞서 방어했던 권위주의 정부를 퇴진시켰다. 완성된 4월혁명은 일본과 터키 학생운동을 자극하여 1960년 일본 총리의 퇴진과 터키 멘데레스 정부의 붕괴에 기

61) 채장수, 앞의 논문, 2004. p.9. 기념사업회, 앞의 책, 2021, pp.119-125.

62) Linz, Juan J.,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 Crisis, Breakdown, & Reequilibration*,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63) 정근식, 앞의 논문, p.21

여했을 정도로 개도국 민주화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64)</sup>

둘째 완성된 혁명론과 달리, 4월혁명의 목표와 정신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거나 당시의 혁신계 활동 및 통일운동이 이후 군사쿠데타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미완의’ 혁명론이 있다. 이는 4월혁명 20주년을 지나면서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시켜 한반도 전체의 통일된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4·19 정신이자 목표로 보았다.<sup>65)</sup> 4·19정신이 박정희, 전두환 군부권위주의에 저지 당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4·19의 현재성을 강조했다.<sup>66)</sup>

셋째 혁명의 완성 혹은 미완과 달리 4·19와 5·16을 ‘연속적인’ 혁명과정으로 보는 흥미롭고 논쟁적인 주장도 있다. 역사가 크레인 브린튼(Crane Brinton)으로부터 지적 세례를 받은 차기벽은 2·28을 서구의 근대 혁명과 비교하면서 연속혁명론을 최초로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sup>67)</sup>

“4·19와 5·16을 하나의 혁명으로 간주하고 (중략) 4·19는 혁명의 제1단계인 민중 반란에, 그리고 5·16은 혁명의 제2단계인 급진파의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듯 하다. 곧 4·19는 학생층을 비롯한 지식층이 취약한 중산계급을 대신해서 일어나서 신절대주의를 타도한 시민혁명의 첫 단계였다고 하겠다. 그것은 특히 혁명을 일으킨 세력과 혁명 과업을 수행할 세력이 일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혁명의 첫 단계였다. 장면 정권은 이 단계에서 정권을 잡은 온건파였다. 그리고 5·16은 한국적 특수 상황 속에서 군대가 급진파 혁명세력에 대신해서 일으킨 쿠데타, 곧 혁명의 둘째 단계였다고 하겠다.<sup>68)</sup>”

완성론과 미완론이 군부를 악으로 간주하지만, 연속혁명론은 당시 군부의 역할에 역사적 의미를 인정한다. 김성환에 따르면 당시 대부분 농촌 혹은 도시 하층민 출신이었던 사병과 장교는 군 경력을 통해 계층상승을 원했다. 한국에서 최초로 대량의 화이트칼라를 생산해 낸 곳이 바로 군이었다.<sup>69)</sup> 최장집 역시 당시 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64) 이대우, 앞의 논문, 1999, pp.63~7~64. 일본 학생운동은 당시 미일 안보조약 비준을 거부하면서 ‘한국 학생을 본받자’는 구호를 외쳤으며 결국 기시 노부스케 총리(2차대전 전범이자 아베 신조수상의 외조부)를 퇴진시켰다. 터키 멘데레스정부에 저항하는 학생 운동가들 역시 ‘한국의 이승만처럼 사임할 것’을 요구했고 군부는 멘데레스 정부를 쿠데타로 붕괴시켰다.

65) 김학준, “4·19혁명, 오늘의 의미”, 『4·19혁명론1』, 한완상 외, 서울: 일월서각, 1983.

66) 백낙청, “4·19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성”, 위의 책.

67)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혁명에서 나타난 일련의 시퀀스(구체제-온건체제-급진체제-테르미도르의 반동)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 크레인 브린튼, 차기벽 역, 『혁명의 해부』, 서울: 학민사, 1989.

68) 차기벽, “4·19, 과도정부 및 장면정권의 의의”,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1978, pp. 200-201. 원고 자체는 1975년 성균관대학교의 『사회과학』 13집에 실렸다.

69) 김성환, “4·19혁명의 구조와 종합적 평가”, 김성환, 김정원, 허버트 P. 빅스, 『1960년대』, 서울: 거름,

“1961년 5·16군사정변은 4월혁명의 한계와 실패에서 시작한다. (중략) 군은 한국전쟁의 결과 한국사회에서 가장 근대화되고 잘 조직된 대규모의 강력한 국가기구로서 성장하였다. 국가기구 내에서이든 사회에서이든 군에 필적할 만한 사회세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중략) 군부엘리트들은, 독재와 부패를 혐오하고 구체제의 부정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4월혁명의 학생들과 동일했다. (중략) 그 엘리트들은 스스로가 근대화의 주체세력(modernizer)임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었다.”<sup>70)</sup>

그렇다면 2·28 관련 연구저작은 위의 세 가지 경향 중 어디에 가까운가? 지역 연구자 모두 2·28이 4월혁명의 출발점, 도화선이 되었다는 이른바 ‘2·28의 선도성’테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혁명의 완성론에 친화적이다. 2·28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김일수에 따르면, “2·28민주운동을 4·19혁명의 도화선이라 정의할 때, 2·28민주운동은 그 시작과 출발의 의미로, 4·19혁명은 완성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sup>71)</sup>

여기서 연구시기의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2·28 연구자들은 분석 시기를 2·28부터 4·19로 잡기 때문에 이들 논문은 2·28의 시대적 배경-원인-진개를 거쳐 4·19라는 민주 운동의 승리로 끝나는 내러티브를 갖는다. 이런 시간적 설정 하에서 2·28은 4월 혁명의 도화선이자 출발점이라는 테제가 들어맞는다. 반면에 미완성론, 연속혁명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연구 기간은 대체로 4·19를 넘어 1980년대까지이다. 1980년대에 등장한 미완성론은 2·28과 4·19, 1980년 서울의 봄이 모두 군부 쿠데타에 의해 좌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각성, 동원하려는 다분히 목적론적인 성격을 띤다. 연속혁명론자들은 해방 후 분단국가의 형성, 자본주의적 산업화, 민주화라는 3개의 근대화 프로젝트로써 현대정치사를 재구성하기 때문에 60년대 초 2·28과 4·19에 군부의 쿠데타를 단계론으로 결합시킨다. 흥미롭게도 이들 연속론자들에게 민주주의는 최고의 유일한 선(善)이나 가치가 아니다. 국가형성, 산업화, 민주화라는 3개의 목표와 가치가 모두 근대화에 기여한다. 경제성장 혹은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추동한 군부세력도 근대화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

1984, pp.24-25.

70) 최장집, 앞의 책, pp.96-97.

71) 김일수, 앞의 논문, 2021, p.129.

#### IV. 결론: 새로운 이슈와 프레임 연구를 기다리며

본 논문은 2·28 참여 주역과 연구자들의 열정과 헌신을 이편, 저편으로 나누려는 것이 아니다. 2·28을 하나의 덩어리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다양한 혹은 이질적인 결을 드러냄으로써 더욱 풍성한 연구가 가능한 이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그런데 이 글에서 다룬 연구의 세대와 이슈는 어떤 이론적 근거에 따르기 보다는 필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임을 고백한다. 향후 2·28 연구의 담론과 내러티브 분석을 통해 보다 치열한 논쟁과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중앙의 기억은 이미 주류·보편적 기억이고 담론권력을 가지므로 지역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고정적이다. 지역의 기억들은 늘 쓰레기더미에 버려지거나 잊혀지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대안적 담론을 생성한다.<sup>72)</sup> 2·28 연구자들은 그동안 4월혁명을 서울-중앙의 시각에서 결론짓는 주류 연구 담론에 맞서 당시 대구의 민주운동을 성공적으로 복원해냈다. 특히 기념사업회는 연구 활성화와 기억의 복원, 재현, 실천에 핵심적인 센터 역할을 했다. 비유하자면 이러한 노력은 프랑스 수도 파리의 국립도서관이 아닌, 전국 지방의 문서고로 파묻혀 지방사와 로컬리티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프랑스 아날학과와 같다.

향후 2·28 연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하며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를 적어본다. 첫째 2·28을 복원하려는 학술적 노력이 '1960년 대구'에만 집중되어 특정 공간(대구)와 시간(1960년)에 갇혀 있다. 이는 대전 3·8, 마산 3·15 연구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연구 성과가 이미 상당히 축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과 프레임이 필요하다. 1960년 대구 항쟁을 '시대 배경-원인-전개-결과-의의'라는 프레임으로 연구한 결과물은 이제 포화 상태가 되었다.

각 지역에서 터져 나온 민주항쟁의 열기가 어떻게 상호 자극하면서 4월 혁명과 정부 퇴진이라는 파국을 낳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 마산, 대전, 대구, 부산 등 각 지역의 민주 항쟁에서 사회 집단들의 정치적 참여와 동원이 갖는 타이밍, 범위, 속도, 수준 등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28과 4월혁명,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항쟁을 비교 분석하여 민주적 개방(democratic opening)과 시민사회의 정치화가 왜 어떤 조건에서 실패하고 성공하였나를 살펴볼 수도 있다. 대구와 1960년대에서 더 확장된 프레임을 위해선 비교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기념사업회가 연합하여

72) 정래필, 앞의 논문, 2022, p.327.

2~3년 장기 연구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둘째 대부분 연구자들은 2·28의 이념을 아래로부터의 시각(즉 운동론)에 따라 최대강령적으로 주장한다. 특히 결의문과 구호를 중심으로 2·28 정신을 해석할 때 그렇다. 당시 고등학생들의 교우지와 문집에서 농민사랑, 정의감, 민주성, 민족애, 순수성, 식견, 혁신성까지 도출한다. 2·28 이후 대구 학생들이 다양한 운동(예컨대 학원 민주화, 어용교사 축출, 교원노조 지지, 국회 해산 요구, 반민주 세력 척결, 한미 경협 반대, 2대 악법 반대, 통일 운동 등)에 참여한 것을 두고 학생들의 운동 수준과 정치의식이 점점 성숙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사회운동과 민주항쟁에서 외쳐진 참여자들의 언술은 종종 현실적 조건과 주체의 역량에 맞지 않거나 과거 기억의 복원이 왜곡, 굴절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2·28 연구 담론 분석은 뜨거운 열정이 아니라, 서늘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최병덕에 따르면, 사실 2·28 당시의 구호(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일요등교를 해명하라 등)은 권리 침해에 대한 방어적 성격이 강했다. 강제 동원과 휴식권 침해를 넘어 교육여건 개선 등 국가에 대한 적극적 자유를 요구하진 않았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권리 의식이 더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sup>73)</sup>

사회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현상이면서도, 국가 권력과 정치적 현실이 만들어 내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산물이기도 하다. 기회구조에 따라 참여집단의 특성, 타이밍, 집단 성격과 현실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다. 마산 3·15가 대구 2·28보다 물리적 폭력과 희생, 참여 규모가 컸던 것은 부정 선거‘이후’였기 때문이다. 2·28은 부정선거가 예상되는 사전적 시점이었지만, 3·15의 경우 눈앞에 드러난 반민주적 권력범죄(즉 관권선거, 경찰 발포, 사상자 발생 등)가 학생들을 더욱 강렬하게 자극하고 유인했다. 또한 학생들은 초기에 “공산주의에 도전하는 백의인(白衣人)이 고결한 민족정기”, “조국을 괴뢰가 짓밟으려하면 조국의 수호신으로 가버릴 학도”를 주장하면서 반공주의를 채택했다.<sup>74)</sup> 그러나 나중에 자주적 평화 통일, 선통일 후건설을 주장하면서 점차 급진화되었다. 학생운동의 좌파그룹에 의해 금기시되던 통일문제가 제기되면서 당시 한국 정치의 기회구조가 허용하는 경계를 건드렸다. 그 결과는 군부의 개입이었다. 흥미롭게도 오늘날 우리가 2·28정신이라고 할 때 자주통일적 요소는 삭제한다. 이는 2·28 인식공동체의 기억·망각 복원 작업이 선택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73) 최병덕, 앞의 논문, pp.20-21. 2·28 이후 기념과 기억이 전무했던 이유를 ‘50년의 침묵’이라 명명하고 이를 날카롭게 분석한 유일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배규성, 앞의 논문, pp.116-118.

74) 이대우, “내일을 위한 투쟁”,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사』2(자료편), 2000, p.228. 김보주, 앞의 책, p.138.

셋째 흥미롭게도 대부분 연구자들은 2·28정신과 현재 대구경북의 보수주의가 충돌하는 것에 당혹스러워하며, 정치적 다양성과 민주성을 갖는 대구 분위기를 만들자고 한다. 김태일은 “군부권위주의 통치기간에 대구경북 정신사는 다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며 그것은 아직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2·28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그와 같이 일그러진 부분을 바로 잡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강조는 인용자).<sup>75)</sup> 한 연구자는, 대구 유권자의 보수주의 때문에 2·28정신의 활성화가 어렵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2·28은 당시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민주운동이었고, 현재 한국은 복수의 정당이 민주적 선거경쟁을 통해 시민의 판결을 받아 합법적으로 구성된 정부가 통치한다. 오늘날 대구의 보수적 투표 행태는 독재나 권위주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 정치체제를 구성·운영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이다. 보수적 대구 시민도 독재나 선거부정에는 분명히 저항할 것이다. 대구 시민의 ‘민주적 보수성’은 2·28정신의 복원의 걸림돌이 아니다. 보수주의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 중의 하나이며, 대구 시민의 보수적 선택은 합리적인 민주주의적 선택이다. 연구자들의 당혹스러움은 지식인의 불안이지 대구 시민의 불안은 아니다. ‘보수의 심장’은 대구 시민의 용어가 아니라 서울·중앙의 용어인 것이다.

넷째 2·28 연구에서 가장 미흡한 연구 분야는 2·28의 기념·기억·상징·기록을 어떻게 복원하고 활성화할 것인가이다. 그 이유는 2·28 연구자들이 대부분 정치학자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연구공동체 내에서 국문학자 정래필과 박승희가 지역 기억의 문화적 실천과 기념방식에 대해 유일한 연구성과를 내었다. 2·28 관련 연구·기념·기억을 실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관협력형인 기념사업회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 정치학자 외에도 다양한 전문가·학자(인문학자, 문화예술가, 공연기획자, 도시학자, 교육자, 기록물 전문가, 대구시 관계자 등)이 결합하여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2·28 기억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강순애, “근현대 지역사료 수집, DB 구축 및 공동활용”,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권 2호, 한국기록관리학회, 2008.

고은, 『1950년대』, 서울: 청하, 1989.

---

75) 김태일, 앞의 책, 2000, p.171.



- 김노주,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 2·28민주운동』,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22.
- 김성환, “4·19혁명의 구조와 종합적 평가”, 김성환, 김정원, 허버트 P. 빅스, 『1960년대』, 서울: 거름, 1984.
- 김용호, “공화주의 시각에서 2·28민주운동을 재조명한다”, 『2·28민주운동 연구의 어제와 오늘』,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21.
- 김영하, “2·28민주운동 기념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개선방안 연구”, 『중등교육연구』, 64권 2호, 경북대 중등교육연구소, 2016.
- 김일수, “2·28민주운동의 인식변화와 4·19혁명으로의 계승”, 『민족문화논총』, 79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2021.
- \_\_\_\_\_, “2·28민주운동 결의문과 구호를 통해 본 2·28민주운동의 의의와 지향”, 『대구경북연구』, 20권 2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김태일, “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농민정치”, 한배호 편, 『한국현대정치론I』, 서울: 나남, 1990.
- \_\_\_\_\_, “4월혁명의 출발: 2·28대구민주운동의 정치사적 의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4집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3.
- \_\_\_\_\_, “2·28민주운동 구술사 연구의 의의와 방법”,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 22인의 경험과 기억』,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18.
- 김학준, “4·19혁명, 오늘의 의미”, 『4·19혁명론1』, 한완상 외, 서울: 일월서각, 1983.
- 박명림, “제2공화국 정치균열의 구조와 변화”, 백영철 편,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나남, 1996.
- 박승희, “2·28민주운동의 기억과 기념 방식”, 『영남학』, 75호,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 박진도, 『한국자본주의와 농업구조』, 서울: 한길사, 1994.
- 박태순, “4·19의 민중과 문학”, 『4월혁명론』, 서울: 한길사, 1989, pp.263~297.
- 배규성, “대구 2·28민주운동: 지역적 의미와 계승”, 『국제정치연구』, 14집 1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11.
- 백낙청, “4·19의 역사적 의의와 현재성”, 『4·19혁명론1』, 한완상 외, 서울: 일월서각, 1983.
- 서보건, “인간의 권리로서 쉼 권리(휴식권)와 2·28민주운동 결의문”, 『민족문화논총』, 80권 1호,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 안도현, “2·28민주운동과 ‘쉼 권리’: 결의문에 담긴 일요일 등교 거부에 대한 재해석”, 『대구경북연구』, 20권 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_\_\_\_\_, “쉼 권리 논의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의미: 제도적 차원과 운동적 차원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0집 1호, 대한정치학회, 2022.
- 안도현, 변영학, “2·28민주운동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집단정체성 연구: 2·28민주운동 직후 발행된 교우지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연구』 21권 3호, 대구경북연구원, 2022.
- 양정필, “근현대 지역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역사문제연구』, 17권, 역사문제연구소, 2007.
- 유명철, “2·28민주운동, 3·15 1차 마산의거와 4·11~13 2차 마산의거, 4·19혁명: 그 연관성에 대한 내용 지도의 필요성”, 『사회과교육』,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18.
- 윤순갑, “2·28민주운동과 대구정체성”, 『대한정치학회보』, 26집 4호, 대한정치학회, 2018.
- 윤식, “한국 학생운동의 정신사적 재조명”, 『2·28민주의거의 역사성과 세계성』, 2·28민주의거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000년 2월 25일).

- \_\_\_\_\_, “대구사회와 2·28세대의 역할과 과제”, 『2·28민주운동 연구의 어제와 오늘』,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22.
- 이대우, “2·28 민주주의거의 세계학생운동사에서의 위상”, 『2·28민주주의거의 시대사적 조명』, 2·28민주의 거 제39주년 기념 학술회의(1999년 2월 26일).
- \_\_\_\_\_, “대구경북민족민주운동과 2·28의거”, 『2·28민주주의거의 역사성과 세계성』, 2·28민주의거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2000년 2월 25일).
- \_\_\_\_\_, “내일을 위한 투쟁”, 『2·28민주운동사』2(자료편), 대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000.
- 이만갑, 허버트 R 베린저, 『전환의 도시 대구』, 대구: 양서원, 2012.
- 이완범, “4·19 전조로서의 1960년 초봄 지역 시민운동”,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권 2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3.
- 이은진, “3·15 마산 1차의거 누가, 왜 참여하였는가?”, 3·15의거기념사업회, 『3·15의거 학술논문 총서』, 2010.
-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28민주운동 기념사업 50년』,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10.
- \_\_\_\_\_, 『2·28민주운동운동 기념사업 60년』,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21.
- \_\_\_\_\_, 『2·28민주운동 연구의 어제와 오늘』, 대구: 2·28민주운동 기념사업회, 2022.
- 조동걸, “2·28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오늘의 반성”, 『2·28민주운동 연구의 어제와 오늘』, 대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2000.
- 장세룡, “탈근대와 지방사 연구: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대구사학』, 93집, 대구사학회, 2008.
- 정근식, “지역의 4월혁명: 시각과 연구방법”,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지역에서의 4월 혁명』, 서울: 선인, 2010.
- 정근식, 권형택,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 정근식, 권형택, 『지역에서의 4월혁명』, 서울: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0.
- 정래필, “문화적 실천 관점에서 본 지역 기억의 생성력”, 『국어교육연구』, 78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22.
- 정재요, “2·28정신과 전태일 정신의 현대적 재조명: 설 권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4집 3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1.
- \_\_\_\_\_, “2·28민주운동 서사의 교육적 의미에 관한 고찰: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30집 1호, 대한정치학회, 2022.
- 차기벽, “4·19, 과도정부 및 장면정권의 의의”, 『한국 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 서울: 까치, 1978.
- 크레인 브린튼, 차기벽 역, 『혁명의 해부』, 서울: 학민사, 1989.
- 채장수, “2·28 대구민주운동의 의미론: 민주화의 성격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1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04.
- \_\_\_\_\_, “2·28결의문의 민주주의적 독해”, 『대구경북연구』, 21권 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최병덕, “전통사상적 관점에서 본 2·28민주운동 결의문의 정신과 의미”, 『대구경북연구』, 20권 1호, 대구경북연구원, 2021.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 1996.
- 통계청, 『통계로 본 한국의 발자취』, 서울: 통계청, 1995.
- 홍성태, “4월혁명 기억의 제도화와 사회적 결과”, 한국민주주의연구소,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선인, 2010.

- Hobsbawm, Eric, *The Age of Extremes: A History of the World, 1914~1991*, New York: Vintage Books, 1994.
- Kurth, James R., “Industrial Change and Political Change: A European Perspective,” Collier, David, ed., *The New Authoritarianism in Latin Americ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anger, William L.,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1832~1852*, New York: Harper and Row, 1969.
- Lee, Hahn-Been, *Korea: Time, Change, Administration*, East-West Center Press, 1968.
- Linz, Juan J., *The Breakdown of Democratic Regime: Crisis, Breakdown, & Reequilibration*,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 Moore, Jr., Barrington,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1966.
- Mumford, Lewis, “The Value of Local History”, Carol Kammen, ed., *The Pursuit of Local History: Reading on Theory and Practice*, AltaMira Press, 1996.
- O'Donnell, Guillermo and Philippe C. Schmitter,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Abstract 】

Generations and Issues :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on February 28 Democratic Movement

Byun, Young Hark

This study analyzes history and issues of research works on *February 28 Democratic Movement (Feb. 28)* the first anti-authoritarian surge in contemporary Korean politics. After democratic transition and implementation of local self-government in 1980s, various and consecutive research generations emerged: first generation in 1990s, second in 2000s, third in 2010s, especially in City of Daegu and Gyungbuk Province. The epistemological community were different in methodological skills, narrative structures, contexts, customs, assumptions doing their own researches on the historical event. Main issues of the *Feb. 28* were its origins, leadership and positions, and relations with April Revolution of 1960, which needs to be discussed and analyzed further.

**Key Words** : 2·28 Democratic Movement, 4·19 Revolution, Democracy, Democratization, Korean Politics.